

2012. 3. 5. Vol. 10

주간 농업·농촌 동향

주요 농정 이슈

2011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MB정부 4년, 농정 성과 및 2012년 중점 추진과제
4.11 총선 관련 농수축산연합회 공약 요구(안)

거시경제 동향

2012년 1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기획 정보

국내외 유가동향 및 국내 농업부문 영향
최근 EU 공동농업정책(CAP) 동향

농정 여론 동향

농촌 현장 여론(KREI 리포터 현장의 소리)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연구 지원 정보

2011년 연간 가계동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

주요 농정 이슈_1

2011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 본 자료는 2월 23일 농림수산물부에서 발표한 「지난 해 귀농귀촌 가구 사상 최고인 10,503가구, 23,415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 주요내용

- '11년 귀농귀촌현황: 1만 503가구, 2만 3,415명(가구당 2.2명)
 - 귀농귀촌 가구수는 '05년도 1,240호 내외였으나, '10년 4천호 수준에서 '11년 10,503호로 158% 증가
 - ※ 귀농귀촌 가구 추이: ('01) 880가구 → ('05) 1,240 → ('10) 4,067 → ('11) 10,503

<귀농귀촌 현황-2011년 기준>

단위: 가구, 명, %

구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인천
가구수	10,503	224	2,167	582	727	1,247	1,802	1,755	1,760	115	123
(비율)		2.1	20.6	5.5	6.9	11.9	17.2	16.7	16.8	1.1	1.2
인구수	23,415	470	4,040	1,196	1,727	3,043	4,393	4,031	3,980	305	226
(비율)		2.0	17.2	5.1	7.4	13.0	18.8	17.2	17.0	1.3	1.0

- '11년 귀농귀촌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베이비 부머 세대 은퇴 시작, 전원생활 등 다양한 삶 추구, 국가 및 지자체의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 추진 등 복합적 요인 작용
 - 지역별로는 강원(20.6%), 전남(17.2%), 경남(16.8%), 경북(16.7%)의 비중이 71.3%를 차지
 - ※ 수도권 인접성, 농지가격, 농지구입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특정지역으로 이주
- 연령별로는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이 가능한 50대 이하(59세까지)의 비중이 75.7% 수준이며, 이 연령대가 농업 신규인력 유입의 한 축으로 작용

<연령대별 귀농귀촌 현황-2011년 기준>

단위: 명, %

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10,503	296	1,438	2,682	3,537	1,959	509	82
(비율)	2.8	13.7	25.5	33.7	18.7	4.8	0.8

- 귀농인은 생산기술이 복잡하지 않고, 초기 투자비용과 실패 확률이 낮은 경종분야(52.7%) 선택 비율이 높음. 귀농귀촌인의 전 직업은 자영업 27.5%, 사무직 19.3%, 생산직 8.8% 순으로 나타남.
- 한편, '11년 귀농귀촌 가구 (10,503호) 중 귀농가구가 62.3%(6,541), 귀촌가구는 37.7%(3,962) 수준임.
 - ※ 귀농인: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 귀촌인: 전원생활 등을 위해 농어촌으로 이주한 사람(사업자, 회사원 등 직업인 제외)

<도별 귀농귀촌 가구수 비율>

단위: 가구수, %

구 분	합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인천
합 계	10,503	224	2,167	582	727	1,247	1,802	1,755	1,760	115	123
귀농가구	6,541	113	644	375	559	795	1,521	1,242	1,201	74	16
(비율)	62.3	50.4	29.7	64.4	76.9	63.8	84.4	70.8	68.2	64.3	13.0
귀촌가구	3,962	111	1,523	207	168	452	281	513	559	41	107
(비율)	37.7	49.6	70.3	35.6	23.1	36.2	15.6	29.2	31.8	35.7	87.0

주 1) 농지면적 등 농업여건이 좋은 지역: 전남('11년 이주가구의 84.4% 농업종사)

2) 수도권인접 등 전원생활 여건이 좋은 지역: 강원도('11년 이주가구의 70.3% 귀촌)

※ 연도별 귀농귀촌 현황은 부록 참고.

부록

<연도별 귀농귀촌 현황>

○ 연도별

단위: 가구

구분	합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가구수	30,082	880	769	885	1,302	1,240	1,754	2,384	2,218	4,080	4,067	10,503
누계	30,082	880	1,649	2,534	3,836	5,076	6,830	9,214	11,432	15,512	19,579	30,082

○ 시·도별

단위: 가구

구분	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계	30,082	880	769	885	1,302	1,240	1,754	2,384	2,218	4,080	4,067	10,503
부산	1	-	-	-	-	-	1	-	-	-	-	-
대구	0	-	-	-	-	-	-	-	-	-	-	-
인천	216	-	1	-	16	28	2	-	-	26	20	123
광주	13	-	-	5	6	-	1	-	-	-	-	1
대전	2	1	-	-	-	-	1	-	-	-	-	-
울산	7	-	-	-	-	7	-	-	-	-	-	-
경기	833	57	18	44	19	28	57	89	126	102	69	224
강원	3,769	151	26	156	227	102	134	121	141	232	312	2,167
충북	1,967	25	43	56	141	68	172	196	142	270	272	582
충남	2,476	28	74	46	137	237	184	157	227	335	324	727
전북	4,444	127	90	145	166	73	250	467	385	883	611	1,247
전남	4,235	77	67	51	37	89	249	257	289	549	768	1,802
경북	6,732	115	218	86	334	359	378	772	485	1,118	1,112	1,755
경남	4,900	243	210	265	203	242	267	277	373	525	535	1,760
제주	487	56	22	31	16	7	58	48	50	40	44	115

○ 연령별

구분	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계	30,082 (100%)	880	769	885	1,302	1,240	1,754	2,384	2,218	4,080	4,067	10,503
29이하	1,438 (4.8)	38	62	64	34	54	70	44	31	686	59	296
30~39	5,547 (18.4)	316	258	239	243	287	315	386	328	1,184	553	1,438
40~49	8,821 (29.3)	293	238	260	402	393	565	766	699	1,294	1,229	2,682
50~59	8,841 (29.4)	187	149	201	423	319	481	706	632	749	1,457	3,537
60이상	5,435 (18.1)	46	62	121	200	187	323	482	528	167	769	2,550

주요 농정 이슈_2

MB정부 4년 농정 성과 및 2012년 중점 추진과제

※ 본 자료는 2월 27일 농림수산물부에서 발표한 「이명박 정부 4년, 농정 성과 및 2012년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 핵심 성과

1. 농업 개혁

-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으로 농업인은 생산에 전념하고, 가공·판매는 농협이 담당하는 체제 마련
 - 원활한 사업구조개편에 필요한 부족자본금 지원(5조원) 및 조세특례(법인세, 취·등록세 등 면제)조치
- **경제부문 자본금 확충 및 경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을 통해 경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경제부문에 자본금을 집중 투자하여, 시장교섭력 확보**(경제사업 자본금: '11년 0.27조원→'12년 5.95)

2. 식품산업 육성 및 농식품 수출 77억 달러 달성

- 농식품부 출범('08.2)과 함께 규제대상이던 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화 전략 산업화하여 '10년에는 식품산업 매출액이 142조원으로 증가
- '11년 76.9억 달러 수출을 통해 국가 전체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는 성과를 달성하고 일본 시장 위주에서 수출시장 다변화 성공
- 한식세계화의 체계적 추진으로 한식 세계화 붐 조성 및 성과 가시화

3.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와 이력제를 확대

- '08년부터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시행 이후 소비자의 적극적인 호응, 영업자의 협조 및 제도·단속 등으로 빠르게 제도 정착

- 쇠고기 이력제 시행('09.6)으로 위생·방역상 문제발생 시 신속한 추적을 통한 방역의 효율성 제고 및 유통의 투명성 확보

□ 2012년 중점 추진과제

1. 농수업의 경제사업 활성화 추진

- '12.3.2일 농협경제지주회사 출범을 계기로 유통시설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농협중앙회를 지도 지원에서 판매중심으로 개편하여 경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 ※ '12년에 청과도매물류센터 건립(안성센터 기계·설비 설치), 양곡유통센터 착공(안성), 축산물종합유통센터 착공(부천) 등 1조 53억 원 신규투자
- 이를 위해 '농협경제사업평가협의회'(15명 이내)를 통해 경제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평가

2. 농수산물 물가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

- 수급 불안품목 중심으로 사전대응을 강화하고, 농업관측 개선, 농협계약재배 확대('11: 생산량의 12% → '12: 20) 등 수급안정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가격안정 도모
- 농·수협 경제사업 활성화와 연계하여 생산자단체 중심의 유통계열화로 유통비용을 감축하고, 직거래 확대('11: 사이버거래소 매출액 6,255억 원 → '12 : 1조 원) 등 유통경로 다양화·선진화 추구

3. 쟁예 농어업인 육성 및 귀농귀촌 활성화

- 농어업계 학교 교육과정 개선, 창업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올해 신규 전문인력 2,500명, 매출 1억 원 이상 경영체 4천개를 육성
- 'Mr. 귀농·귀촌!', 귀농·귀촌 One-stop 정보·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등으로 올해 귀농·귀촌 가구 2만호('11: 1만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지원

4. 농식품 수출 100억 달러 달성

- 성장 가능성, 농어가 소득증대 효과가 큰 25개 수출 전략품목을 중점 지원하고, 농어업 시설현대화 지원을 대폭 확대('12~'21년, 총 10조 원 규모)하여 농어업을 수출산업
 - ※ 신선: 인삼, 김치, 파프리카, 배, 버섯, 장미, 딸기, 사과, 토마토, 단감 / 가공: 소스류, 면류, 유자차, 조제분류, 막걸리 / 수산: 김, 넙치, 굴, 전복, 해삼 등
 - ※ 시설현대화 예산: ('11) 2,450억 원 → ('12) 4,109(이차보전방식 포함시 7,002)

5. 양식산업의 육성

- 10대 전략품목(갯벌참굴, 해삼, 전복, 광어(넙치), 참다랑어, 해조류(김·미역), 새우, 뱀장어, 능성어, 관상어) 중심으로 양식시설현대화, 양식어장 신규개발, R&D를 지원하여 양식산업을 적극 육성

주요 농정 이슈_3

4.11 총선 관련 농수축산연합회 공약 요구(안)

※ 본 자료는 2월 23일 농수축산연합회에서 발표한 「4.11 총선 관련 농수축산연합회 공약 요구(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 7대 핵심 요구사항 및 15대 농정 과제

1. 경제민주화와 연계된 FTA 추진

- 농수축산분야를 전면 제외한 제한적(낮은) 한·중 FTA 추진
- 대기업의 법인세 출연으로 농수축산업 발전 기금 확립(무역이득환수)

2. 직불제 확충을 통한 농어가소득 보장

- 쌀 목표가격 및 보전율 인상
- 밭작물 목표가격제 도입
- 고령농 직불금 지급

3. 농수축산물 생산비 가격 안정화 정책 마련

- 사료가격안정기금 도입
- 농자재가격 심의위원회 구성
- 교환율 보상제 도입

4.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 할 수 있는 유통체계 개선

- 농협 신경분리 점검위원회 구성
- 도매시장지정권 환수 및 도매시장관리공사 설립

5. 농어업 관련 기관 특별 채용 및 농어업인력 육성

- 후계 농어업 인력에 대한 대학등록금 전액 환급
- 농어민 자녀 농업관련 기관 50% 특별 채용

6. 농어업 금융 경색 완화를 위한 농어업금융체계 개편

- 농어업정책자금 금리 1% 인하
- 농신보 문제 해결을 위한 농어업금융공사 설립

7. 지속가능한 농수축산업을 실현하기 위한 농림수산물 예산 확보

- 국가예산 증가율 수준의 농림수산물 예산 확보

거시경제 동향 정보

2012년 1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 본 자료는 2월 28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2년 1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 2012년 1월 중 신규취급액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3.75%로 전월대비 2bp 하락한 반면 대출금리는 연 5.79%로 전월대비 10bp 상승
 - 저축성수신금리의 경우 순수저축성예금금리(-1bp)와 시장형금융상품금리(-5bp)가 모두 하락하면서 2bp 하락
 - 대출금리는 가계대출금리(+43bp)*를 중심으로 10bp 상승
 - 대출금리와 저축성수신금리의 차는 2.04%p로 전월대비 12bp 확대
- 2012년 1월 말 잔액기준 총수신금리는 연 3.07%로 전월대비 2bp 상승한 반면 총대출금리는 연 6.0%로 전월대비 1bp 하락
 - 총대출금리와 총수신금리의 차는 2.93%p로 전월대비 3bp 축소

<예금은행의 가중평균금리>

단위: 연%, %p

구분		2009.12	2010.12	2011.11	2011.12	2012.1	월중 동락
신규 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 금리(A)	3.70	3.32	3.69	3.77	3.75	-0.02
	· 순수저축성예금	3.71	3.32	3.68	3.77	3.76	-0.01
	· 시장형금융상품	3.67	3.29	3.72	3.75	3.70	-0.05
	대 출 금 리(B)	5.81	5.40	5.83	5.69	5.79	0.10
	· 기 업 대 출	5.79	5.52	5.90	5.81	5.83	0.02
	· 가 계 대 출	5.95	5.08	5.60	5.37	5.80	0.43
	· 공공 및 기타대출	5.45	4.67	5.47	5.10	4.98	-0.12
금 리 차(B-A)		2.11	2.08	2.14	1.92	2.04	0.12
잔액 기준	총 수 신 금 리(C)	3.18	2.85	3.11	3.05	3.07	0.02
	총 대 출 금 리(D)	5.86	5.70	6.05	6.01	6.00	-0.01
	금 리 차(D - C)	2.68	2.85	2.94	2.96	2.93	-0.03

□ 비은행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 2012년 1월 중 비은행금융기관 예금금리(1년만기 정기예금 기준)의 경우 상호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이 하락한 반면 상호금융은 전월과 동일하였으며, 대출금리(일반대출 기준)의 경우 모든 기관에서 상승
 - 상호저축은행: 예금금리는 2bp 하락, 대출금리는 244bp 상승
 - 신용협동조합: 예금금리는 6bp 하락, 대출금리는 15bp 상승
 - 상호금융: 예금금리는 전월과 동일, 대출금리는 2bp 상승

<신규취급액 기준>

단위: 연%, %p

구분		2009.12	2010.12	2011.11	2011.12	2012.1	월중 동락
예 금	상호저축은행 ¹⁾ (정기예금, 1년)	5.19	4.39	4.79	4.76	p4.74	-0.02
	신용협동조합 ²⁾ (정기예탁금, 1년)	4.86	4.20	4.72	4.71	p4.65	-0.06
	상 호 금 용 (정기예탁금, 1년)	4.54	3.95	4.30	4.29	4.29	0.00
대 출	상호저축은행 ¹⁾ (일 반 대 출)	11.48	12.68	17.02	14.71	p17.15	2.44
	신용협동조합 ²⁾ (일 반 대 출)	7.64	7.39	7.23	7.11	p7.26	0.15
	상 호 금 용 (일 반 대 출)	6.91	6.28	6.24	6.26	p6.28	0.02

주 1) p는 잠정치

2) 2008.1월부터 전체 신탁 대상

기획 정보_1

국내외 유가동향 및 국내 농업부문 영향

※ 본 자료는 지난 2월 23일 지경부 '물가관계 장관회의' 에서 발표한 석유TF 정책과제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내용과 동향분석실의 국내 농업부문 파급 영향 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임.

□ 최근 국제 유가동향과 전망

- (현황) 두바이유는 지난 2주간 \$110에서 \$117.7로 급격히 상승, 국제휘발유가격도 일부 정유사(대만·인도) 공급차질로 \$130대 돌파
- 최근 그리스 재정위기 해결 기대 및 미 경기지표 개선으로 유가가 상승세이고 서방-이란 간 갈등이 기저효과로 작용 중

<최근 유가 동향>

구 분	'11년	'11.12월	'12.1월	2.2주	2.3주	12.2.20	12.2.21	전일비
Dubai(\$/B)	105.98	105.51	109.52	113.71	116.25	117.98	117.69	△0.29
Brent(\$/B)	110.91	107.72	111.45	117.14	118.94	120.05	121.66	1.61
국제휘발유(\$/B)	117.43	111.50	120.69	126.39	129.35	130.06	130.10	0.04
원/\$ (한은)	1108.06	1147.36	1145.46	1119.0	1123.78	1124.40	1122.70	△1.70

- (전망) 이란사태 영향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이 국제시장에 지속 영향을 미칠 경우 두바이유는 130\$이상 수준으로 상승할 우려

□ 국내 유가동향과 전망

- (현황) 전국 평균 휘발유가격은 7주 연속 상승한 1,990원으로, 1월 2주 이후 49원 상승으로 국제유가(60원)보다는 완만한 상승세
- * 환율이 1월 2주 평균 1,159원→현재 1,120원대로 하락하면서 완충 작용
- (유통마진) 최근 정유사·주유소 유통마진(143원/ℓ)은 '10년 평균인 152원, 11년 149원보다 낮은 수준

<정유사·주유소 유통마진 변화 추이(휘발유(원/ℓ))>

단위: 원/ℓ

기간	'10년	'11년 상반기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1주	2.2주	2.3주
정유사	55	13	24	53	47	58	64	33	45	51	41	60
주유소	97	109	118	121	73	80	159	142	75	88	109	83
합 계	152	122	142	174	120	138	223	175	120	139	150	143

- (전망) 2월말까지 국제유가 강세로 인한 정유사 공급가 인상요인이 작용하여 당분간 국내유가 상승추세는 지속될 전망

□ 국제 원유가격 상승에 따른 농업부문 영향

- (중간투입재) 국제유가 10% 상승시 농업투입재(농업용품) 가격은 4.2% 상승, 제조업 투입재는 2.6% 상승(탄력성기준)될 것으로 추정되어 제조업 부분 보다 국내 농업부문에 더 큰 영향
- 농업용품 중 비료비 6.4%, 영농광열비 6.0%, 사료비 3.6% 등 순이며, 농촌임료금(3.8%)도 유가 상승에 따라 상승

<시나리오별 농업투입재 가격 변화율>

단위: 탄성치, %

구 분	유가탄력성(e)	시나리오1 (\$110)	시나리오2 (\$130)	시나리오3 (\$150)
생산자물가	0.218	3.3%	6.5%	10.2%
·제조업 중간재	0.264	3.8%	7.4%	11.7%
·농업용품	0.402	6.1%	12.0%	19.1%
- 종자	0.025	0.4%	0.7%	1.1%
- 비료	0.640	10.6%	21.4%	34.8%
- 농약	0.161	2.4%	4.6%	7.2%
- 농기구	0.277	4.3%	8.5%	13.4%
- 영농광열비	0.599	9.9%	20.0%	32.3%
- 사료	0.357	4.4%	8.6%	13.7%
- 영농자재	0.298	3.8%	7.5%	11.8%
·농촌임료금	0.381	5.9%	11.7%	18.6%

주: 배럴당 \$110(시나리오1), \$130(시나리오2), \$150(시나리오3)의 경우를 각각 고려 그리고 기준(baseline)으로는 2011년 평균 수준인 \$100 지속해서 유지되는 수준을 설정(보도자료 참조)

○ 유가 상승으로 전반적인 농업생산 활동 위축

- 유가가 배럴당 \$130로 증가할 경우(시나리오 2) 현재 대비 비료(21.4%), 영농광열(20%), 사료(8.6), 농기구(8.5) 영농자재(7.5%) 순으로 중간투입재 가격 상승

○ (농산물 판매가격)농산물 부류별 판매가격 역시 유가 높을수록 높은 상승률 보임.

- 시나리오 2 (배럴당 \$130)의 경우 가격 상승률은 부류별로 근채류(12.6%), 축산물(9.9%), 기타농산물(7.0%) 순이며, 품목별로는 양파(10.7%), 일반미(3.9%) 순으로 가격 상승률이 높음.

○ 유가 상승은 농업경영비 부담으로 이어져 생산이 위축되기 때문에 수급불균형에 의한 농산물 판매가격의 상승 예상

<시나리오별 농산물 부류별 판매 가격 변화율>

단위: 탄생치, %

구 분	유가탄력성(e)	시나리오1 (\$110)	시나리오2 (\$130)	시나리오3 (\$150)
총지수	0.183	2.7%	5.2%	8.1%
곡물	0.147	2.3%	4.5%	7.0%
청과물	0.078	1.0%	1.9%	2.9%
채소	0.149	1.7%	3.4%	5.2%
엽채류	0.159	2.5%	4.9%	7.6%
근채류	0.648	6.2%	12.6%	20.4%
조미채류	0.168	1.5%	3.0%	4.6%
축산물	0.311	5.0%	9.9%	15.6%
기타농산물	0.234	3.6%	7.0%	11.1%
일반미	0.121	2.0%	3.9%	6.1%
양 파	0.316	5.4%	10.7%	16.9%
건고추	0.131	0.9%	1.7%	2.7%
마 늘	0.018	0.2%	0.3%	0.5%

기획 정보_2

최근 EU 공동농업정책(CAP) 동향

※ 본 자료는 2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발표한 「해외 aT센터 주재국 농업 및 경제정책 동향 보고서」의 내용 중 EU 공동농업정책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CAP개혁을 위한 입법 제안(2011.10.12)

- 동 입법 제안은 유럽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유럽시민들에게 고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촌 환경 보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패키지로 구성
- 동 입법 제안 패키지는 4개의 주요한 이사회 법령제안과 3개의 부가적인 법령 제안으로 구성
 - 4대 법령: ① 직접직불금, ② 단일공동시장관리, ③ 농촌지역개발정책, ④ CAP예산관련법령
 - 3개 부가법령: 주요법령을 시행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필요한 법령

□ CAP개혁 법안 10대 개선방안

1. 성장과 고용을 위한 목표지향성 소득보조 추진

- 농가직불금을 형평성, 목표지향성, 간편성 제고 방향으로 개선
- 기본 직불금(Basic Payment)은 실제 활동농가에 대해서만 지급
 - 농가당 보조금이 연간 150천 유로 이상이면 지급액을 체감 계산하고 연간 300천 유로의 상한액 설정(단, 고용창출 고려)

2. 새로운 경제위기에 더욱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위기관리수단 구비

- 농산물 가격 변동성 확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공적개입(public intervention)과 민간비축지원(private storage aid) 제도를 유지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

- 모든 작물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시장관리정책을 도입하여 e-coli(병원성 대장균) 오염사고와 같은 광범위한 시장교란 위기에 EU 집행위가 긴급히 시장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함.**
- 농산물 관련 보험과 뮤추얼 펀드(mutual fund: 유가증권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회사)제도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개선

3. 생태계 보전을 위한 ‘녹색’ 직불금 도입(greening 의무 부과)

- 농업분야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보존하기 위해 **현행농가 직불금의 30%**에 대해서는 **자연자원을 최적화하는데 사용**하도록 하는 부대조건을 부여함.
- 이러한 부대조건은 ① 다양한 농작물 재배, ②영구적 초지(草地) 유지, ③ 생태학적 목적으로 경지면적 7%를 유보하는 것 등임.

4. 연구 및 혁신 관련 투자 확대

- 지식 기반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위해서 **농업관련 연구·혁신 예산을 2배로 증액**하고 농업계와 과학계 간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통해 **연구결과의 농촌현장 활용도를 제고**

5. 더욱 경쟁력 있고, 균형 잡힌 식품 체인이 되도록 지원

- 조직화 정도가 취약한 농업분야의 **거래 교섭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생산자 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를 활성화**시킴.
- 현재 EU차원의 유일한 쿼터제도인 설탕 쿼터제도에 대해서는 2015. 9.30 이후 이를 폐지기로 함(우유쿼터와 와인 지배권 쿼터는 폐지기로 기 결정).

6. 농업 환경 정책의 지역 자율성 제고

-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국가별, 지역별 차원의 농업 및 환경정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생태계를 보존, 회복시키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농촌지역개발정책 틀**속에서의 우선순위를 부여함.

7. 젊은 농업인의 창업을 쉽게 아도록 지원

- 40세 이하의 젊은 농업인에 대해서는 창업 초기 5년간 기본 직불금(Basic Payment)을 25% 추가 지원하는 프로그램 신설(단, 회원국별 평균 농업경영규모 이하의 중소농에 대해서만 지원)

8. 농촌의 고용과 기업 활동 촉진

- "Starter kit" 프로그램(농촌의 중소기업에 대해서 5년간 7만 유로까지 지원) 등 다양한 **농촌지역 활성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LEADER 프로그램의 농촌 지역 내 활용 역량 강화**

9. 조건 불리 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

- 사막화를 방지하고 비옥한 영토를 보존하기 위해 **불리한 자연조건에 있는 농업인들에 대해 회원국 차원의 지원액을 증액**(현행 회원국 예산의 5% 범위 내)
- 이를 위해 EU회원국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며 기존의 농촌지역개발 정책 차원에서 지원하는 예산 이외에 추가적인 예산으로 지원

10. CAP의 단순화 및 효율화

- 불필요한 **행정비용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CAP 정책 집행과정을 단순화**함.
- “Small Farmers Scheme”을 도입하여 중소농에 대한 지원책을 단순화함.
 - 2014.10.15까지 동 제도 수혜를 신청하는 중소농에 대해서 500~1,000유로의 직불금을 연간 지급하고 동 중소농에 대해서는 의무준수규정(Cross-compliance)의 의무를 경감하고 녹색 직불금 의무를 면제함.

□ 농촌지역 겨울철 난방비 부담거...태양열 시설, 심야전기 지원 요망

- 겨울철 경유를 사용한 보일러 4인가족 난방비가 60~70만 원에 달함. **태양열 시설이나 심야전기 지원도 2~3년 전부터 끊겨** 마을회관의 난방조차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임.<오인하, 경남 마산>
- 심야보일러를 설치해 사용했으나 **심야전기가 할증**이 되어 월 50만 원이 넘는 요금이 부과되는 실정임. 심야전기 할증에 대한 대책이 요망됨.<송인숙, 강원 강릉>
- 심야전기를 활용한 난방을 권장하고 지원해주어 비싼 설치비에도 불구하고 심야전기로 바꾸었는데 **심야전기료가 인상되고 지원도 끊긴 상태임.** <김갑순 경북 영양>
- 요즘 농촌은 겨울 난방비가 월 생활비의 20~30%를 차지할 정도로 부담이 됨. **펠렛용 화목보일러 설치 지원이나 농가주택에 공급이 중단된 심야전기 지원이 요망됨.**<장석우, 충남 청양>
- 혼자살거나 고령의 노인들이 있는 집에선 난방비가 아까워 경로당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음.<박종규, 전남 구례>
- 농가에게 태양열이나 태양전기, 심야전기를 지원해 주어 난방비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함.<김상우, 제주 서귀포>

□ 안중 FTA 압력적인 농업피해대책 제시 요구

- 농업인들이 생존할 수 있는 대책마련도 없이 FTA를 추진하고 있음. 반대하는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 피해를 최소화 할 것임.<박종규, 전남 구례>
- 한중 FTA가 발효되면 중국산 농산물이 우리 국민의 식탁을 위협할 것임. 국민 안전을 위해서도 농산물 협상은 신중해야함.<연규석, 경기 평택>
- 한미 FTA에 비해 한중 FTA에 많은 농업인들은 더 우려하고 있음. 대규모 농가들은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되나, 농산물 자급률이 떨어지면

서 식량안보 문제가 생길 것임.<방호정, 경남 하동>

- FTA가 국제 경제체제의 큰 흐름이된 이때 농산물을 단순한 먹거리가 아닌 생명산업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정책이 필요함.<송인숙, 강원 강릉>
- 한중 FTA가 발효되면 고추, 양파, 배추 주산지인 전남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됨.<나종주, 전남 화순>
- 제주지역에서는 한중 FTA가 체결되면 감귤농가와 마늘 재배농가의 피해가 직접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김상우, 제주 서귀포>
- 자유무역을 해서 얻어지는게 있다면 **이익금을 농업인들을 위한 보상 대책**에 써야하는데 대책도 마련되지 않고 협상을 추진하고 있어 우려됨. <주양호, 전남 장흥>

□ 기타

○ 오지마을 노인들을 위한 방문진료 필요

- 오지마을 농촌 노인들은 몸이 아프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원거리 보건지소나 시내 병원까지 가서 치료를 받아야함. 오지마을 노인들을 위한 방문진료 등의 지원이 요망됨.<오인하, 경남 창원>

○ 귀농귀촌 정착프로그램과 현장기술 교육 강화

- 도시민들의 귀농귀촌을 촉진하기 위해 좀더 적극적인 정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농촌현장 기술교육도 강화되길 바랍.<김용덕, 경기 남양주>

○ 친환경농업 정착을 위한 관련 정보 제공과 교육 필요

- 지금이 우리나라 친환경농업의 전환기인 만큼 친환경농업 정착을 위한 무농약, 유기농 인증에 관한 각종 정보 제공과 기술교육이 강화되어야함. <장석우, 충남 청양>

○ 농기계 임대사업소 면단위 설치를

-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군 단위로 설치되어 있어 이용(임대신청, 운반 등)에 큰 불편함이 있음. 면단위나 또는 2~3개 면별로 임대사업소를 설치한다면 편리하게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임.<최영호, 충남 부여>

농정 여론 동향_2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 본 자료는 2월 27일~3월 2일 간 국내 농업전문지의 농업·농촌 보도내용을 정리

□ 경지면적 지속 감소...농지 보전 모색 시급

- 전용·유휴·유실과 농지의 비농업적 전용 증가, 농지 보전과 관리에 대한 목표 부재와 인식부족, 지자체로 농지전용 권한의 점진적 확대, 논벼를 비롯한 경종농업의 경제적 수익성 악화 등이 **농지면적 감소** 요인. 농경연, 최근 '경지면적 변화 동향과 대응과제'란 보고서를 통해 **우량농지 보전 방안 제시**. 농지은행에 유휴농지 관리기구 설치, 유휴농지 대책과 농지은행의 농지매입·비축사업과 결부시키는 방안 검토 제안

자료: 한국농어민신문(2012.2.27).

□ 감귤값 好好好...농가 싸움노력 통했다

- 간벌*과 비상품감귤의 시장격리 등 감귤농가들의 자발적인 노력, 제주 특별자치도와 농협 등 생산자단체 수출 증대와 출하물량 조절 등으로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감귤값 고공행진 상승**.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20일 현재까지 2011년산 감귤은 대도시 도매시장에 전년 같은 기간(31만9,100t)보다 적은 31만8,800t 출하. **서울 가락시장 감귤 10kg들이 상품 한상자 1월(평균 3만 원)~2월(4만 원대) →최근 5만 원대 유지**

※ (間伐): 삼림이나 수목 농장에서 중심적인 나무의 성장을 돕기 위해 뺄뺄하게 자라 있는 나무를 솎아 간격을 틈틈이 형성하게 하는 일, 솎아 간격을 틈틈이 형성하게 함.

자료: 농민신문(2012.2.27).

□ 과일 수입량 10년새 두배 증가

-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 발표 통계, **지난해 수입과일이 10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하여 역대 최대 물량 수입**. 수입과일이 대체재로써 수입조절 역할로 인해 수입량 증가,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수입량 급증, 과일가격 상승으로 정부의 할당관세를 통해 수입을 부추긴 것도 한 요인. 지난 2~3년간 이상 기후로 인해 과수, 과채류의 생산량 감소, 재배면적도 감소해 국내산 과일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 필요

자료: 원예산업신문(2012.2.27).

□ 농식품부 귀농·귀촌 대책

- 농식품부, 귀농·귀촌 지원을 위해 **6대 핵심전략을 추진**. 원스톱 정보제공, 맞춤형 교육 실시, 농지·주택구입 2억 4천만 원까지 지원해 **경제적 지원 확대**, 농어촌 주택을 취득한 사람에게 **세제감면 혜택**, 27개 지자체에 26억 원 지원 등 **농어업농어촌식품산업기본법에 귀농·귀촌 지원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개별법령 제정 필요성도 검토. 2015년부터는 **농어업창업조사에 귀농·귀촌 조사가 포함되도록 추진**

자료: 농민신문(2012.2.27).

□ 대형유통업체 불공정거래에 과징금 확대

- 대형유통업체,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대금을 감액한 경우 등 불공정거래 적발 시 과징금 대폭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마련, 2.28일부터 시행. **매출액의 2% 범위였던 것이 납품대금 또는 연간 임대료의 범위 내로 강화**. 과징금 산정기준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관련 납품대금 또는 관련 임대료의 20~60%, 관련 납품대금 등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정액과징금 1,000만~5억 원, 위반기간·위반횟수·조사 거부·보복행위·고위임원의 법 위반행위 관여 등이 발각될 경우 과징금의 10~50% 가중.

자료: 농민신문(2012.2.29).

□ 안·중 FTA 추진 진통 예상

- 외교통상부, 26일 “지난 24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한·중 FTA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FTA 추진위원회 심의와 대외경제장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한·중 FTA 추진방향을 결정할 예정”. **공청회, 농민단체의 반발로 협상 개시 선언까지 험로 예상**. 대외경제장관회의는 민간인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진행. 이런 절차를 마무리하면 양국은 협상 개시 선언. 정부, 부실 논란 피하기 위해 업종별 간담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좀 더 밟기로 함. 또 협상 개시 선언에 앞서 한·중 FTA 추진계획을 국회에 보고.

자료: 농민신문(2012.2.29).

□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289억 투입”

- 농식품부,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및 가격 경쟁력 제고 위해 친환경농산물 소비지 판매장 및 직거래매취 자금 지원 등 유통 활성화 자금 289억 원 지원. **친환경농산물 소비지 판매장 지원사업**=특별시·광역시, 경기도 등 소비지에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장 신규 개설을 위한 임차 보증금 및 매대, 시설 설치비용 **19억 원 지원**.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매취 자금 지원**=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적정가격 보장 및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270억 원 지원**

자료: 한국농어민신문(2012.3.1).

□ 축산업 피해보전직불금 해당연도 평균·기준가 차액 90%

- 정부, 28일 ‘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 열고 **축산업의 피해보전직접직불금 산출 기준과 축산업 특정 품목의 폐업지원금 산출 공식 마련**. 피해보전직불금의 지급 단가는 해당 연도 평균가격과 기준가격 차액의 90%. 일반(축산)기준은 출하마릿수, 낙농은 납유량(ℓ), 양육은 사육마릿수×마리당 연 평균 녹용(녹각) 생산량(kg), 산란계는 사육마릿수×평균 산란율(%)×365, 양봉은 사육봉군수(개)×봉군당 연 평균 부산물 생산량(kg)임. 폐업지원금, 출하마릿수×연간마리당 순익×3년, 낙농·양육·산란계·양봉은 별도의 공식으로 적용

자료: 축산신문(2012.2.29).

연구 지원 정보

2011년 연간 가계동향

※ 본 자료는 2월 24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1년 4/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임.

□ 가계수지 동향

- **2011년 연간 가계소득**은 월평균 384만 2천 원으로 **전년대비 5.8% 증가**(물가수준을 감안한 실질로는 1.7% 증가)
 - 2011년 연간 가계소득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9년 1.2% 증가에 그친 이후, 증가폭이 확대된 2010년과 동일한 증가세 유지
 - 이는 근로소득(6.3%), 사업소득(4.5%), 이전소득(9.0%) 등의 증가에 기인
- **2011년 연간 소비지출**은 월평균 239만 3천 원으로 **전년대비 4.6% 증가**(실질로는 0.6% 증가)
 - ※ 연간 소비지출 전년대비 증감률: ('09년) 1.7% → ('10년) 6.4% → ('11년) 4.6%
- **2011년 연간 비소비지출**은 월평균 72만 2천 원으로 **전년대비 7.2% 증가**
 - 소득증가, 고용확대 등에 따른 조세, 연금 및 사회보험 등 증가에 기인

<가계소득 및 지출의 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전년(동기)비, %, %p

구분	2009	2010	2011
· 소 득	1.2	5.8	5.8
(실 질)	-1.5	2.8	1.7
· 소 비 지 출	1.7	6.4	4.6
(실 질)	-1.1	3.4	0.6
· 비 소 비 지 출	3.7	7.6	7.2
· 처 분 가 능 소 득	0.7	5.4	5.5
· 후 자 액	-2.4	2.2	8.3
· 평균소비성향	0.7p	0.7p	-0.6p

○ 2011년 비목별 소비지출은 교육부문을 제외한 모든 비목에서 전년대비 증가

- 식료품비는 농산물 물가상승에 주로 기인하여 7.1% 증가하고, 주거비는 월세 증가에 주로 기인하여 5.5% 증가
- 교통비는 자동차 구입 증가 및 연료비 물가상승으로 8.7% 증가한 반면 교육비는 정규교육비 감소와 학원·보습교육비 소폭증가로 0.7% 감소

<2011년 비목별 소비지출 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

구분	식료품	의류신발	주거수도광열	가정가사	보건	교통	통신	오락문화	교육	음식숙박
명목	7.1	7.4	5.5	4.3	2.8	8.7	3.1	1.9	-0.7	2.8
실질	-0.9	3.9	0.9	0.6	1.0	1.6	4.8	0.3	-2.4	-1.4

□ 소득분배 동향

○ 2011년 전체가구(1인 및 농가포함) 가처분소득기준 지니계수는 0.311로 전년 0.310과 유사한 수준임.

○ 2011년 전체가구(1인 및 농가포함) 5분위배율은 5.73배로 전년대비 0.07%p 상승

○ 2011년 전체가구(1인 및 농가포함)의 상대적 빈곤율은 15.2%로 전년대비 0.3%p 상승

<균등화 가처분소득 기준 소득분배지표>

단위: 배,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지니계수	전체 가구	-	-	-	0.306	0.312	0.314	0.314	0.310	0.311
	2인이상 비농가	0.277	0.283	0.287	0.291	0.295	0.296	0.294	0.288	0.288
5분위배율	전체 가구	-	-	-	5.38	5.60	5.71	5.75	5.66	5.73
	2인이상 비농가	4.43	4.61	4.75	4.83	4.95	4.98	4.95	4.81	4.80
상대적 빈곤율	전체 가구	-	-	-	14.3	14.8	15.2	15.3	14.9	15.2
	2인이상 비농가	11.4	12.1	12.9	12.6	12.9	12.9	13.0	12.5	12.3

※ 자료 작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